

문재인 정부와 결별하라

관련 기사 2~4, 12면

문재인 정부와
결별하라

2~4, 12면

경찰법 개정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4면

프랑스 50만 보안법 반대 시위
권위주의 강화, 이슬람 혐오,
파시즘에 맞서서

6~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의 배경

9면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공산 큰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8~9면

자본주의가
실업의 원인이다

10면

노동자 운동

노동법 개악
이케아의 추악한 진실
코레일네트워크 파업

11, 12면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김문성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1년 반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 수사로 불거진 청와대-검찰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 후 2주간 정국은 요동을 쳤고, 종지부는 커녕 정권의 위기만 심화시켰다.

윤석열은 법원 판결로 이틀 만에 직무를 재개했고, 징계위원회는 두 번이나 연기됐다. 검찰 전체가 법무부(와 청와대)의 결정에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법무부는 윤석열 찍어 내기에 판사들을 이용하려고 판사 사찰 프레임을 짰으나 먹히지 않았고, 사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개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해야 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4일에는 부동산 대책 실패로 원성을 한 몸에 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마침내 경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징계 문제에서도 절차를 잘 지키라고 징계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법원 등에서 절차 문제로 꼬투리 잡히지 않게 제대로 해임하라는 뜻이다.

이는 사실, 정권의 부패를 덮어 위기를 막으려다 벌어진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과 위선적인 “권력기관 개혁” 정

쟁의 총책임자이자 지휘자가 문재인 대통령 본인임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애초에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해임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역풍

그러나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한 개악과 공작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관련 법 개정 ‘강행’을 사실상 공개 지시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에 대한] …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다.]”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려면 8일 각 상임위들에서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 8일 국회 정무위, 법사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우파 야당과 진보 야당들을 모두 속이거나 반대를 무시하고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예상대로 기만적인 국정원법 개정 등을 개혁으로 포장하거나 별 실효도 없는 사회적참사특별법(세월호 2기 특조위법) 개정 등을 포함시켜 개혁을 위한 진통처럼 포장했다. 정치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핵심 계급 기반인 기업주들을 위해 노동법 개악 등 개악 입법에 전념하면서, 포퓰리즘 전략도 이용한 것이다.

공정경제 3법 통과를 두고 사용자 단체들이 반발했지만, 실제 통과된 내

용을 보면 이들의 엄살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재계”의 의도는 더 많은 친기업 개악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고용보험·산재보험 전면화, ILO핵심협약 비준처럼 노동자 운동 측의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월호 진상 규명 관련 법 개정도 생존자·유가족의 바람에 한참 못 미쳤다.

반면 탄력근로제 개악과 노조법 개악안(예고한 것보다 누그러졌지만)은 통과됐다.

“K-방역”을 자랑했지만, 대유행 조짐이 만연해지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됐다. 대비를 거의 안 했으므로 방역 실패 책임론도 만만찮을 것이다.

개혁 포장으로 지지층을 재결집하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반 추세가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위기가 심화된다는 점 때문에 진보진영 안에서 정권 편을 들어야 할지 정권과 거리를 뒀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우파 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통행에 맞서 일부 법안에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했다.(그러나 탄력근로제 개악 등은 그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미처리 등을 비판했다. 정의당 내에는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의당은 여전히 정권의 비리 은폐용 공작인 공수처 설립 자체는 지지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청와대-검찰 갈등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됐다. 문재인은 특혜와 비리가 속속 드러나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반발이 커져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되자 임명 35일 만에 조국을 사퇴시켰다. 정부·여당 말대로 검찰이 억울한 혐의를 씌워서 개혁을 음해하는 것이었다면 버티고 싸웠어야 했다. 친여 단체들이 “검찰 개혁”을 기치로 서초동에 수십만 명을 동원했지만,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자 문재인은 조국을 사퇴시켰다. 그리고는 조국에게 “마음의 빛”이 있다고 말했다.

그 뒤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은 모두 여권 인사들의 권력형 부패 혐의 수사와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거의 다 추미애에 의해 좌천되거나 사임해야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건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일부러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임을 시사한 것이다. 울산시장 송철호는 1980년대부터 부산과 울산에서 노무현, 문재인 등과 함께 인권 변호사로 어울렸던 사

이다.

옵티머스, 라임의 펀드 사기 의혹도 터졌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펀드 사기 건도 있다. 세 의혹 모두 정권 실력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뒤바꾸기 의혹이 있다. 이미 청와대 관리들이 두 명이나 구속돼 있다. 이 중에는 비리 관리들을 감찰하거나 걸러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자도 있었다. 조국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도 뇌물을 받고 금융 비리를 무마했다는 것이었다. 옵티머스 건에서는 결국 당시 국무총리이자 현 여당 대표인 이낙연이 연루된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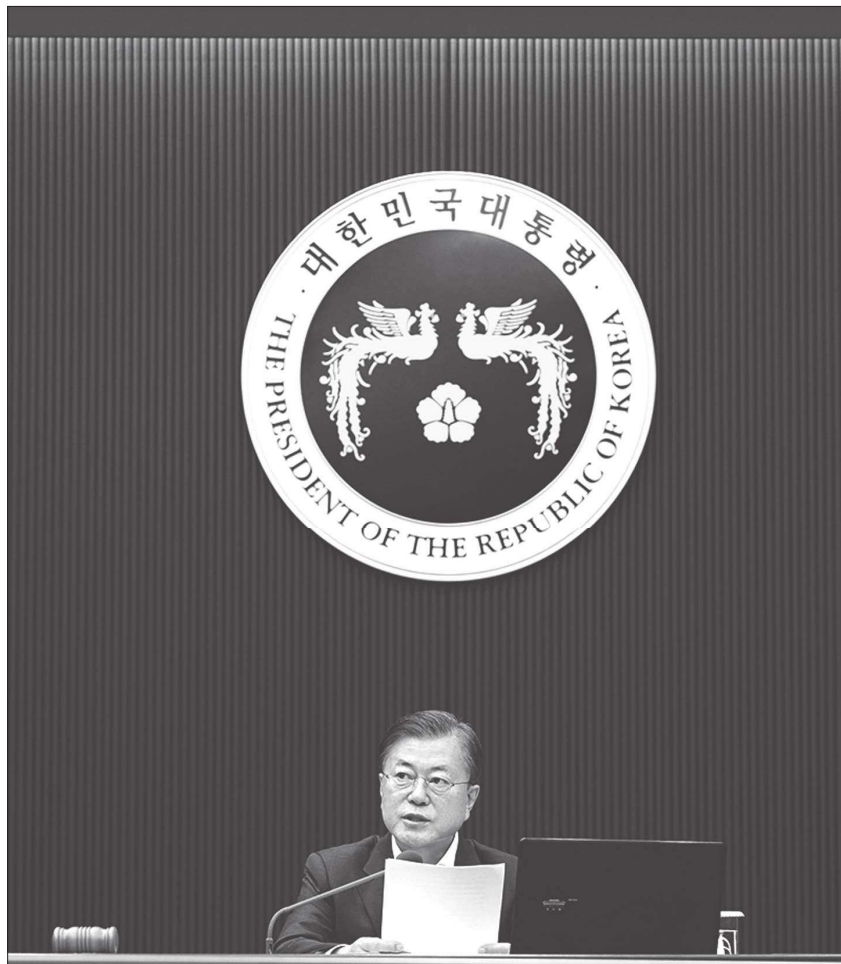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 속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김학의 건과 버닝썬 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버닝썬 건에서는 경찰 간부와 현 청와대의 연계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묻혔다.

여권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게 문제라면서 정작 그 둘을 다 가진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한다.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것은 그저 자기 정권의 통제만 잘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정권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이 ‘영웅’처럼 띄운) 윤석열에게 하고 있는 행태는 공수처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미리 보여 준다.

이제 대중은 검찰이 얼마나 부패하고 억압적인지 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권력형 부패 혐의를 수사하는 것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렇다고 검찰을 응원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키고 이명박·박근혜 구속에 박수 친 것은 민주당 정부는 부패해도 상관없다고 여겨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감싸기는 심지어 친기업 개악의 주체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경향이 있다. 의료 산업화를 주구장창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경찰력 강화 등 권위주의적 통제를 늘리는 일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8~9일 국회에서 봤듯이, 위기 속에서도 개악의 칼자루를 쥔 것은 문재인 정부다. 진정으로 진보적인 사회 변화를 바란다면, 문재인 정부와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의 위선과 미온성, 개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정권 수사한 검찰총장 찍어내며 반부패 수사기관 만들겠다는 위선

검찰의 월성 핵발전소 폐쇄 관련 수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검찰은 경북 월성 핵발전소 폐쇄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이 직무정지에서 풀리자마자 한 일은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승인한 것이었다. 핵심 혐의는 감사를 앞두고 감사원에 제출해야 할 경제성 조작 관련 문건들을 몰래 삭제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건으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백운규가 기소돼 있다.

월성 핵발전소 폐쇄는 핵산업을 국가 전략적, 경제적 이유로 발전시키려는 우파가 지속해서 반대해 온 것이다. 감사원이 1년 동안 감사를 벌였다. 우파 야당 국민의힘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7000쪽에 이르는 감사 보고서를 검찰에 제공했다. 한마디로, 핵발전소 폐쇄에 반대하려고 벌인 감사와 수사 의뢰인 것이다.

검찰은 아마도 자신들이 당한 모욕을 되갚으려고 우파의 지지를 이용해 실정법 위반이 분명해 보이는 이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듯하다. 검찰은 삭제를 실행한 실무자들에게서 장관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받아내려는 듯하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특히 안전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절대 옳다. 그것이 사회 전체에 안전하고 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설령 형식상 위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전혀 부차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만만찮은 탈핵을 위

해 월성 핵발전소를 폐쇄한 것은 아니지만, 월성 핵발전소 건은 다른 권력형 부패 의혹과 구별해야 한다.

한편, 위법 여부가 부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한국에서는 기업의 정치 자금 제공을 처벌하지만, 미국에선 합법이고 대통령 선거 같은 전국적(또한 국제적) 이벤트에선 단연 최고 화젯거리이다. 정경유착을 합법화한 것이므로 미국 정치 시스템이 더 부패한 증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사실 도긴개긴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위법 여부로 부패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음은 명확하다. 가령 조국의 자녀 표창장이나 인턴 수료증 위조, ‘스펙 품앗이’ 같은 일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 난다고 해서 그것이 특권층의 특혜 세습을 위한 불의한 부패 행위라는 진실이 달라지진 않는다. 노동계급의 도덕은 종종 실정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검찰의 월성 수사를 비판한다고 해서 탈핵 약속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핵발전소 해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다. 게다가 문재인은 검찰의 이반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 정권과 매우 가까운 LKB엔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출신이자 월성 건에서 전 산자부 장관 백운규의 변호인을 맡고 있던 이용구를 임명했다. 이용구는 윤석열 찍어내기 공작의 일부임이 곧바로 드러났다.



부동산 대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불러온 중요한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검찰이 막강해서거나 우파의 반격이 먹혀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침체와 부동산 폭등 문제는 지속적인 위기 요인이다. 대중의 삶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약속한 개혁들을 내놓고 배신해 놓고 부패 감싸기를 민주주의의 수호라고 떠들어대는 오만한 위선을 보면서 대중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찍어내기 후폭풍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정권의 무리수와 자충수가 국가기관 안에서 검찰을 이반케 하고, 그것이 더한층의 민심 이반을 낳고 있다. “부하”들이 이반했다는 점에서 권력 누수이고 레임덕의 시

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지난해 조국 때와 다른 점이다. 지난해에는 검찰 안에서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라인을 지지하지 않는 검사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올해 추미애가 인사권으로 윤석열 라인을 쳐낼 수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진보·좌파 안에서 노동자연대 같은 혁명적 좌파를 빼면 문재인 정부의 조국 비리 감싸기에 대한 분명하고 예리한 비판을 찾기 힘들었다. 좌파 중에는 양비론을 취하거나, 검찰 개혁(지극히 공상적이고 부자연스런)을 주장해 চে여한 정치 쟁투 속에서 정권에 대한 정면 비판을 회피한 곳들이 있었다. 그때까지는 아직 윤석열도 검찰 내에서 실권이 있었다. 그래서 조

국 건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반의 폭이 훨씬 넓다. 민주당 차악 논리의 설득력이 약화된 것이다. 이는 문재인이 개혁 배신으로 이미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이반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이맘때와 달리 측근들이 대거 잘려나갔고, 수사에 관여하기도 어렵고, 도리어 자기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식물총장 상태다. 그런데도 지금 검찰 전체가 정권에 반기를 들며 윤석열 편에 서고 있다. 판사들도 청-검 갈등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청와대를 곤경에 빠뜨렸다. 아마 추미애가 윤석열을 해임하고 물러나도 후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정권의 힘이 빠지고, 내년 상반기 재보선을 앞두고 정권의 구심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파와 적폐 세력의 반격 때문이 아니라 정권 스스로 개혁 배신과 위선으로 자초한 위기이다. 진보·좌파가 정부 비판에 초점을 뒀야 하는 것은 대중의 이반을 왼쪽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검찰을 편들기 위함은 아니다. 무엇보다 현재 자본주의 국가의 수장이 누구인가, 누가 계약의 압도적 주체인가를 봐야 한다. 이가 빠지고 날이 무더져서 그렇지, 검찰 문제에서도 아직도 칼자루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완전 결별해야 한다

국가 기구들 사이의 분열은 정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두면서도 포퓰리즘 전략으로 그동안 세계적 추세인 정치적 양극화를 국내에서 어느 정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이 위기가 불러올 정치적 불안정은 이런 양극화를 다시 촉진할 수 있다. 진보·좌파가 문재인 정부와 결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을 기회가 되고 있다.

노동운동의 대표적 3조직(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이 문재인 정부와 결별하지 않는 데에는 시

스템 내 개혁을 지향하는 개혁주의 전략 문제도 있다. 하지만 기층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정부와 협력해서는 개혁을 얻을 수 없다는 게 갈수록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 지도력은 혼란과 지지기반 잠식을 겪을 것이다.

새로운 압력이 기층의 투쟁에서 생겨나야 한다. 좌파의 과제인데도 일부 좌파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비판하면서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식으로 부패 문제를 은근히 회피한다. 문재인

의 부패 감추기는 그것이 그가 진보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 분명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좌파는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기만·개악과 단절하도록 이끌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개혁 배신에 실망한 대중, 특히 노동자와 보통의 청년들의 실망과 불만을 대변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앞세워 진보를 참칭하고, 진보진영의 대표적 조직들도 정부와 결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게 실망한(정치적 경험도 미숙한) 청년들 사이에서 ‘진보와 좌파는 죄다 내로남불인가’ 하는 의심이 자랄 수 있다.

당장은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 의힘은 더 싫다며 무당층이 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리라는 법도 없다. 정치 위기의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 침체가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런 정치 상황은 정치적 불안정뿐 아니라 불확실성도 키우는 듯하다. 선명하고 비타협적인 정권·체제 폭로가 필요하다.

현 정치 상황의 특징과 과제

첫째, 윤석열 문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아니라 집권층 부패 의혹을 수사하려는 검찰과 그것을 막으려는 청와대 사이의 갈등이 본질이다. 책임자이자 지휘자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둘째,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검찰이 불러온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 이미 개혁 배신과 부패를 덮으려는 위선 때문에 환멸이 자라났고, 문재인 정부는 지지층 이반과 지지를 하락 위기를 겪고 있었다. 청-검 갈등과 검찰의 이반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촉매제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 목적은 자본주의 국가의 현 관리자로써 체제를 수호하는 데 있다.

셋째, 지금의 갈등과 정치 불안정은 세계적 추세의 일부이다. 지금 세계는 경제 침체, 코로나19 팬데믹, 국제 질서 불안정, 기후 위기 등이 결합된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이는 정치 불안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를 반대하는 저항이 곳곳에서 성장하고 있다. 한국 지배자들도 마찬가지로 요인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 지배자들은 현재의 위기가 야기하는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효과적으로 전가하기 위해 (특히 이윤을 위해) 국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공수처 소동에는 권력층 수사와 체제 안정의 관계라는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시기 한국에서는 정치 불안정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저항보다는 국가기구 내 갈등으로 먼저 표출되고 있다.

넷째, 문재인은 부패하고 억압적인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마찬가지로 부패한 경찰의 힘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훨씬 더 방대한 조직이고 일상적으로 평범한 서민들을 괴롭힌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권력기관 개혁”이 체제 불안정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법원은 체제 수호 구실을 하는 억압적인 자본주의 국가기구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개혁될 수가 없다.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홍보는 이를 수 없는 것을 이를 것처럼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해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뿐이다. 사법적 양보(덜 억압적이고 좀 덜 불평등한 수사나 판결)는 오로지 체제에 도전해 그것을 흔들 때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러라도 얻어 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인 검찰 ‘개혁’을 지지해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다.

다섯째, 노동운동은 위기를 겪는 체제와 그 수혜자들에 대한 반대를 모아내고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거나 적당히 반대해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단절하고 국가기관 내 갈등을 활용해 개혁 배신에 실망한 노동자·청년을 기층에서 분기시켜 저항의 진정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관련 추천 영상: 12월 7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경찰법 개정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김승주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월 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통합됐다. 골자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시·도 자치경찰로 나누고, 이 가운데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후자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통제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라는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지를 뒤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경찰 개혁”이라고 부른다.

분권화? 비대화

그러나 경찰 서열 꼭대기에 있는 경찰청장이 각 조직의 인사권 등 핵심 권한을 쥐고 있는 위계는 여전하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조차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100으로 보면 이번 개정안은 10 정도”라고 말할 정도다.

‘제2의 군대’라고도 불리는 거대 관료기구 경찰을 “자치”라는 표현으로 꾸미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관련 기사: 344호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무엇보다 이번 경찰법 개정은 ‘새 가족’(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을 들인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경찰의 비대화를 낳을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찰 권력은 이미 비대해져 왔다. 경찰 공무원은 2019년을 기준으로 2012년 대비 약 23퍼센트 증가했다. 국가 공무원 증가율의 3배, 지방 공무원 증가율의 1.4배다. 경찰 공무원의 수는 2019년 기준 12만 명 이상이고, 증원된 2만 3800여 명 중 1만 1500여 명은 문재인 정부 하(2017~2019년)에서 증가했다. 여기에 전경 등을 합하면 경찰은 인력 14만 명이 넘는 거대한 공룡 조직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2만 명 증원을 또다시 약속했다. 2021년 경찰 예산은 12조 원에 이른다.

이번 경찰법 개정도 전국에 200개 넘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등 비대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관리자급 인력이 갑절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신설될 국가수사본부는 검찰과 국

정원으로부터 이관받아 강화된 수사권을 담당하는 기구다. 그 산하에 설치된 안보수사국은 경찰의 핵심이자 사찰 부서인 정보국과 보안국을 확대·강화하고 국정원 출신 수사관들을 흡수할 것이다. 이미 경찰은 경력직 안보(보안) 수사관 40여 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역 치안?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특히 정권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수사 부서와 권한을 축소하고 이것을 명분으로 경찰력을 강화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이 최측근 전해철을 경찰이 소속된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 앉힌 것도 시사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이 “K-방역”과 “방역 치안”에 공헌하고 있다며 추켜세운다.

그러나 경찰이 하는 일은 진정한 방역이 아니다. 지침을 어긴 개인들을 연일 추적하고 찾아내서 벌금을 매기고 철창에 집어넣는 억압적 방식은 코로나 19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팬데믹 초기부터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는 촉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주 이윤을 건드리지 않으려 무진장 애썼고, 그래서 방역 대책이 모순되고 오락가락하기 일쑤였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고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모두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설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유급휴가와 재난지원금 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뻘뻘하게 붙어서 대중 교통을 이용하며 공장 과 사무실로 모여야만 한다.

식당이나 술집 이용, 여행을 자제하고 “잠시 멈춤” 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연일 부르짖으며 소비를 장려한다.

결국 방역 실패를 국가의 억압 강화로 메우는 것이 경찰의 “방역 치안”의 본질이다. 이런 시도는 대중이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책임자가 누군지 흐려버린다(시스템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탓하기).

세계적 흐름

정부와 경찰이 “방역 치안”을 내세워 노동자 집회를 비난하는 것도 위선이고 엉뚱한 책임 전가다.

경찰은 12월 4일 노동개악 반대 집회를 한 민주노총 노동자 두 명을 구속하고 수십 명을 내사 중이다. 그러



12월 4일 노동개악 반대 집회를 강제 해산시킨 문재인인의 경찰 민주노총은 “방역 실패 책임 떠넘기지 말라”고 규탄했다

나 그날 집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 탓에 제한적 규모로 열렸다. 1000여 명이 스무 곳 넘는 장소에 나누어 모이거나 1인 시위를 하는 식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찰 부대를 181개나 동원해 시위를 막고 해산시켰다.(대규모로 모인 게 어느 쪽인가?)

경찰의 억압 강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유행과 경제 위기로 도처에서 지배의 정당성이 흔들리자 지배자들은 불만을 통제하려고 경찰력 강화를 꺼내들고 있다.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경찰 만행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벌금 6000만 원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보안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그 와중에 경찰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흑인 한 명을 20분간 쉴 새 없이 구타했다. 그 영상이 공개돼 프랑스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대중 수십만 명이 2주째 격양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벌써 수십 명이 구속됐다.

그리스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모임을 금지하면서 다른 한 편에선 관광 산업 재개를 위해 방역 단계를 완화했다. 최근 확산세가 심해지자 키리아코스 마초타키스 총리는 “비밀 파티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타했다. 최근 그리스 경찰은 노동자연대의 그리스 자매단체 사회주의노동자당(SEK) 지도부와 당원 수십 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는 마스크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쓰지 말라더니, 확산세가 극심해지자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 200파운드(30만 원)를 매긴다. 벌금은 추가로 걸릴 때마다 배가돼 최대 960파운드(64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경찰의 끔찍한 만행은 우리에게 낯선 일이 아니고 오래 전 일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사망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찰도 2005년 농민 집회에서 두 명이 죽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대중 저항 수준이 커진다면 경찰의 폭력적 본질도 노골화할 것이다.

문재인인의 “경찰 개혁”은 착취와 억압을 완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목적은 오히려 경찰력을 강화해 진보·좌파와 노동자 운동의 저항을 억누르는 데에 있다.

주류 양당은 이런 일에서는 이견이 없다. 두 자본주의 정당은 국회 행안위에서 경찰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면서 그간 이 개정안에 반대해 온 이은

주 정의당 의원을 배제해 버렸다.

사실 정부의 목적에 비춰 보면, 정의당의 경찰법 개정 비판이 견제 장치나 기구를 더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데 머무는 것은 불충분하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이 “감염병 대책의 공적 역할에 이바지한 조직이고 행정명령의 감시 단속의 주체”(지난 10월 경찰의 날 국회 발언)라고 덧붙였다. 이런 유화적 발언으로는 경찰 비대화를 한결같이 반대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으로 치장하는 경찰력 강화에 원칙에 입각해 반대해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바이든 내각은 친기업-반노동 소굴
- ★ 추악한 체제의 대가를 노동계급이 치르고 있다
- ★ 노동자의 돈을 챙겨 먹는 억만장자들
- ★ 인도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선 반격에 합류한 농민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 ☐ 2년 |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장호중

코로나19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사실상 0개”다.(<경향신문> 12월 8일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기다려야 하는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경증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원해야 하지만, 병실과 인력 부족 등으로 집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 중 이른바 ‘해피 하이폭시아(저산소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잖은 것을 고려하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해피 하이폭시아는 폐가 많이 망가져 산소 공급이 부족한데도 호흡곤란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환자들은 갑자기 증상이 악화해 몇 시간 만에 사망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컨테이너 병실을 설치하고 ‘홈케어(재택 격리)’를 늘려야 한다는 등 부실하고 위험천만한 실천과 말을 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앞두고 “11월 학생 확진자 70퍼센트가 가족 감염”이라며 집에서도 거리두기를 하라고 했던 말과 완전히 모순된다. 대부분의 노동자 서민 가정에서는 거리두기는커녕 개별 공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컨테이너 병실이 설치되고 있는 서울의료원의 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 분회)은 병원 측이 가용 병상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병실을 짓고 있는 상황을 규탄했다.

게다가 정부가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계속 허용하는 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거리와 직장으로 나가야 한다. 대중교통을 늘리기는커녕 줄여 한밤중에도 ‘지옥철과 만원 버스를 타야 한다. 여기에 가족을 통한 2~3차 감염 또한 방치하는 셈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노동당, ‘코로나19대응 대구행동’ 등은 각각 성명을



12월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컨테이너 병상이 설치되고 있다. 땀질식 대처가 아니라 민간병원을 수용해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

내, 정부가 민간병원들의 병상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실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완전히 옳다. 역대 정부들이 공공병원에 거의 투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공공병원의 시설과 인력난은 매우 심각하다. 그나마 1년 가까이 버텨 온 것은 정부가 사실상 병원 노동자들과 공무원을 갈아 넣어 흡사시켜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양질의 시설과 전문 인력이 모여 있는 민간병원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물론 겨울철에 접어들며 대부분의 민간병원들에서도 비어 있는 중환자 병상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윤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들의 ‘자발적’ 보고에 의존해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세계에서 병상

수가 가장 많다는 이 나라에서 환자들을 컨테이너나 전시장에 입원시키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지난 1년 동안 공공병원을 단 한 개도 세우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도 공공병원 신축을 위해 배정한 돈은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공공병원들이 적자를 낳는 ‘애물단지’로 변할까 봐 우려하는 것일 테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똑똑히 확인한 것은 공공병원의 적자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이었다. 몇 해 전 ‘착한 적자’라는 말이 회자된 이유다.

정부는 ‘덕분에,’ ‘코로나 영웅’ 하며 떠들썩한 칭찬 캠페인을 벌였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형편없다. 지금도 중환자실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문제인은 이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수도권 역학 조사 강화’만 지시했다. 당연히 공무원과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만 연장되고 있다.

이들이 ‘번 아웃’으로 나가 떨어지기 전에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공공병원 신설 0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을 거듭 후순위로 미룬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이윤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백신 보급이 최소한 반년 이상 결렬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의 거리두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생산 속도를 늦추거나, 생산 속도를 유지하려면 인력과 시설 투자를 늘려야 한

다. 이는 기업주들에게 이윤 감소로 돌아오겠지만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전 국민에게 ‘인내’를 요구하면서도 기업주들만은 예외로 배려한 것이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된 권덕철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영리화를 기획·추진해 온 인물로 유명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임명돼 일해 왔다. 지금 같은 상황에 이런 인물을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보면 정부는 진작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활용해 의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세워 온 듯하다. 택배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냉담하게 지원 한 톨 없던 정부가 기업주들의 이윤 획득 기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 주는 대목이다. 삼성·SK·LG는 어느덧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제약 생산기지를 구축해 놓고 있었다. SK는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백신 생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역이 취약해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데도 거리두기를 완화했고, 그 기준으로 5단계로 바꾸며 느슨하게 만들었다. 그레 놓고 확산세가 커지자 평범한 사람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도 여전하다. 특하면 “엄중한 상황” 운운하며 마치 평범한 사람들이 병을 퍼뜨리거나 한 것처럼 군다. 정작 정부 자신은 소비 쿠폰을 뿌리고 관광을 장려하고 언택트(접촉 없는) 산업 성장을 외쳤다. 수많은 생산직 노동자들과 택배 물류 노동자들에게 언택트 산업 활성화는 오히려 더 많은 접촉을 뜻하는 것이지만 인력 지원은 말뿐이었다.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와 노동강도 강화, 소득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별근거도 없는 ‘집회 금지’ 조치에 그토록 열심인 것은 스스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릴수록 이런 조처는 점점 무리수가 돼 갈 것이다.

백신 소식에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이유

영국에서 시작된 백신 접종 소식에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적잖은 사람들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백신 개발 ‘성공’을 선언한 곳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세 곳이다. 한국 정부도 이 제약 기업들과 백신 공급 계약을 맺거나 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세 제약사 모두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기존 백신 제조 방식

보다 위험을 줄였다지만, 줄기세포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정밀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경험적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임상시험 결과는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동료평가(피어리뷰)’도 아직 거치지 않았다. 영업 비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작용에 대한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다. 일종의 ‘갑질’이다.

각 기업이 수만 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것인 만큼 급성기 부작용이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중장기 부작

용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이를 충분한 돈과 시간을 쏟아 검증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떠올려 보라. 당시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관된 연구자들 일부에게 안전성 평가를 맡겨 놓고는 거짓 결과를 채택해 사용 승인을 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 책임 회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롭 윌리스 같은 생물학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발표한 임상시험 결

과에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브라질에서 각각 이뤄진 임상시험 결과를 뒤섞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까지 백신을 생산한 적도 없는 기업인데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 이런 의구심을 검증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방역 실패가 드러나자 백신에 대한 기대를 부풀려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한다. 백신 접종 가능 시기가 불과 하루 사이에 ‘내년 하반기’에서 ‘상반기에 가능할 수도’로 옮겨졌다. 그 사이에 무슨 계약이 이뤄

진 것도 아닐텐데 말이다.

정부는 백신 자체는 무료로 공급하겠다는면서도, 접종비의 경우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고 이외에는 적정하게 그 비용을 (자가)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오히려 취약계층이 접종을 미루게 돼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당연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무료로 접종해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그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백신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는 식으로 방역과 의료에 대한 투자를 미루도록 내버려 뒀어도 안 된다.

프랑스 50만 보안법 반대 시위

권위주의 강화, 이슬람 혐오, 파시즘에 맞서다

김종환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2월 8일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기사로 정리한 것이다.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노동자연대 TV'에서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경찰 보호 악법인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몇 주째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은 경찰을 비판할 목적으로 경찰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면 최대 징역 1년, 한국 돈으로 최대 6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 반면, 경찰은 시위에 촬영에 안면 인식 기능과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수십 곳에서 최대 50만 명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여당이 일부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후에도 1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 와중에 경찰 여러 명이 한 흑인 청년 음악가를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분노가 급속히 커졌다. 경찰들은 단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흑인 청년을 폭행했다. 그의 집에 들이닥쳐 20분 동안 쉬지 않고 폭행했다. 나중에 이웃들이 달려와 경찰들을 밖으로 밀쳐 내자 경찰들은 적반하장으로 창문을 깨고 최루탄을 던지고는 그들에게 총을 겨눴다. CCTV에 그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면 흑인 음악가와 동료 주민들은 어떤 혐의를 뒤집어 씌웠을지 모를 일이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경찰의 이런 행태를 처음 본 양 “큰 충격”이라고 했지만 이는 순전한 거짓말이다. 불과 며칠 전에도 경찰이 파리 한 광장의 난민촌을 폭력적으로 철거한 영상이 SNS를 달궜고 마크롱 정부는 진상 조사를 약속했었다.

경찰 보호 악법, 권위주의 강화의 일환

프랑스 경찰의 폭력성은 고질적인 문제다. 프랑스의 유색인, 특히 아랍계와 흑인은 경찰의 인종차별적 검문과 일상적 폭력에 시달린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백인보다 훨씬 자주 경찰에게 공격받고 목숨을 잃는 것처럼 말이다.

그 때문에 올해 6월 프랑스에서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크게 분출했다. 당시 시위대는 미국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기렸을 뿐 아니라 프랑스 경찰서에서 목숨을 잃은 흑인청년 아다마 트라오레의 이름도 외쳤다.

아다마 트라오레의 죽음과 당국의 대응은 프랑스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지 보여 준다. 그는 2016년 경찰에 연행된 후 숨졌다. 당시 경찰은 그가 심장마비로 죽었고 부검했더니 약물이 검출됐으며 자신들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믿지 않은 유족들의 항의로 2차 부검이 실시됐는데 경찰의 말과



여당의 양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 10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12월 5일 파리

달리 트라오레의 사인은 지속적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판명됐다. 경찰이 살인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이 번지면서 유가족과 지지자들,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언론은 물론이고 지자체 단체장까지 나서서 경찰이 아닌 유가족을 비난했다. 이들은 일부 “불량배”들이 경찰을 공격하고 있고 “진짜 프랑스인은 경찰을 지지하라”고 선동했다.(트라오레 가족도 엄연히 프랑스인이다.) 일부 유가족들은 부당하게 투옥되기에 이른다. 올해 프랑스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다마 트라오레를 위한 정의’ 같은 단체들이 수년간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랑스 경찰은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이다. 그리고 마크롱의 보안법은 바로 이런 경찰들을 보호하는 악법이다.

프랑스 지배자들은 최근의 위기에서 권위주의적 대응을 강화해 왔다. 보안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없애고 있다”고 울분을 토한다

경찰력 강화와 무슬림 차별은 연관돼 있다

마크롱이 경찰 보호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난 수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자들이 권위주의적 조치를 강화해 온 연장선에 있다.

마크롱 이전 사회당 올랑드 정부는 개악을 계속 밀어 붙이다가 지지율이 추락하고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억누를 목적으로 반세기만에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이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다.

마크롱도 2018~2019년 유류세 인상과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운동을 경찰력으로 꺾어잡았다. 경찰의 시위 진압이 어찌나 잔인했는지 실명하거나 손가락을 잃는 시위 참가자가 속출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또 올해 초 마크롱은 프랑스 노동자들의 연금을 일괄 개악하려 하면서 의회 표결을 건너뛰려 했다. 개악 반대 파업이 이어지고 반대 여론도 커지면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부르주아 의회조차 거추장스러워 한 것이다.(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연금 개악 시도는 2021년으로 미뤄졌다.)

이렇듯 프랑스 지배자들은 최근의 위기 속에서 권위주의적 대응을 강화해 왔다. 보안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주민과 노동자들에게 폭력적이기로 악명 높은 프랑스 경찰 12월 5일 파리

정부가 “민주주의를 죄다 없애고 있다”고 울분을 토한 데는 이런 맥락이 있다.

프랑스 지배자들이 권위주의 조치를 강화할 때 휘두르는 또 다른 무기는 이슬람혐오다.

11월 초 마크롱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프랑스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했다. 마크롱은 앞으로 모든 이슬람 관련 단체들이 “공화국의 가치”를 준수한다고 서약해야 하며 그러고도 정부가 보기에 “공화국의 가치”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들은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프랑스 무슬림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마크롱 정부는 지난 2일 ‘프

랑스 내 이슬람혐오에 맞서는 단체’(CCIF)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 단체는 공공장소 하잡 착용 금지나 부르키니 착용 금지 같은 이슬람 혐오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로 UN경제사회이사회에도 정식 등록돼 있다. 마크롱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NGO를 프랑스판 ‘이적단체’로 규정해서 해산명령을 내린 셈이다. 이를 두고 온건한 국제 NGO인 휴먼라이츠워치조차 “프랑스 무슬림들에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다른 이들만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크롱이 이처럼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더 엄혹해질수록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떠넘기기 위해서다. 마크롱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지를 하락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억압적 정책 강화를 정당화하려고 “내부의 적”을 운운한다. 그러나 이전 중도 좌·우파 정부들도 지지를 하락에 직면해 억압적 조치를 강화하려 했지만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한편, 마크롱이 이슬람혐오를 고약하게 부추기는 또 다른 구체적인 맥락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라는 것이다. 마린 르펜과 마크롱은 지금 20퍼센트대 지지를 기록하며 1위를 놓고 엿지락 뒤치락하고 있다.

파시즘의 지지 상승

마린 르펜이 속한 정당 국민연합(옛 이름 ‘국민전선’)은 제2차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나치 정권에 부여했던 인물들이 다양한 극우를 결집해서 세운 정당이다. 마린 르펜은 이당의 초기 핵심 지도자 장마리 르펜의 딸이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파시스트들은 독일의 히틀러를 좇아 유대인을 배척했고 우생학을 내세워 우월한 인종의 지배를 주장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범한 사람들이 파시즘에 치를 떨게 되자 이들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외피를 바꿔야 했다. 우생학을 근거로 한 유대인 배척을 숨기는 대신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며 이슬람혐오를 선동한다.(하지만 자신들만의 은밀한 회합에서는 여전히 유대인 배척을 드러낸다.)

이들은 오늘날 “프랑스의 가치”가 이슬람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했고 프랑스 백인들이 정체성을 위협받는

소수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거짓 프레임 속에서 이들은 이주민을 배척하고 이슬람을 단속하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억압받는 백인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런 황당한 논리가 횡행할 수 있게 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파시스트들이 교묘하게 자기 색깔을 숨기고 평범한 극우 정당 행세를 해 왔다. 그래서 많은 프랑스의 논평가들은 마린 르펜과 국민연합을 더는 위험하지 않은 세력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학자들이나 좌파들은 그것이 위장일 뿐이고 여전히 돈과 간부들은 골수 파시스트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

둘째, 역대 프랑스 정부들이 이주민과 그 후예들을 꾸준히 천대해 온 것이다. 프랑스는 1960년대까지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고 그래서 과거에 식민지로 삼아 지배했던 북아프



사진 출처: berndt (블리키)

파시스트 마린 르펜 2012년

리카 알제리 등지에서 많은 이주민을 불러들였다. 이들 상당수는 무슬림이며, 대체로 백인 프랑스인들보다 가난하고, 임금도 낮고, 해고도 쉽게 당한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 위기와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때마다 책임을 숨기려고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이들을 희생양 삼는다.

이는 파시스트들이 이주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가 실업 등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을 이용해서 파시스트는 “이

주민(또는 무슬림)은 우리 사회의 적”이라고 악선동을 한다. 주류 정당들은 그런 파시스트들에게 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주민과 이슬람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되려 파시스트에게 힘을 실어 주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여기에 1990년대 냉전 해체 이후 미국 지배자들이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이슬람을 악마화하고, “문명의 충돌” 운운하며 ‘이슬람은 서구 문명과 화해할 수 없는 세력’이라는 생각을 유행시키자 파시스트들은 더욱더 기가 살아났다.

세속주의와 이슬람에 대한 좌파 측의 혼란

안타깝게도 프랑스 좌파는 이슬람 혐오에 일관되게 맞서지 못하면서 이런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 좌파 진영의 많은 이들이 “정부나 극우도 문제지만 이슬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며 사실상 양비론을 취했다. 이주민들이 정부의 탄압이나 파시스트의 공격에 맞서서 저항하고 나설 때 그들과 연대하며 운동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그들과 선을 긋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세속주의(“라이시테”)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이런 나쁜 태도에 일조했다. 프랑스는 20세기 초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세속주의를 채택했

다. 이는 당시 지배계급 안에서 만만찮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가톨릭 교회에 맞서는 것이었고 따라서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예전같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프랑스 무슬림은 권력을 갖고 있기는커녕 가장 천대받는 집단이다. 그런 만큼 세속주의를 무슬림 사람들에게 들이대 압박·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히잡 같은 고유한 복장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억압일 뿐이다. 오히려 개인들의 종교적 정체성 표현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

를 추구하는 세속주의와 상반된다.

그런데도 많은 자유주의자와 일부 좌파는 세속주의를 이유로 무슬림이나 이주민을 방어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여기에는 유독 무슬림(특히 여성)에 대해서만 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무슬림들에게 스스로 해방을 쟁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엘리트주의적 편견도 작용한다.

게다가 사회당 같은 중도 좌파는 극우에 맞서 주길 바라는 이주민 단체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작 집권하고 위기에 처하면 자신들 역시 이주민을 희생양 삼았다. 온건한 이주민

단체들은 사회당을 이용해 파시스트의 성장을 막으려 했지만, 그 전략은 오늘날 완전 파산했다.

따라서 극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물론 모든 극좌파가 이슬람혐오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는 못하다. 일부는 기회주의적으로 사회당에 용해됐고, 또 일부는 이슬람혐오적인 주장에 반쯤 문을 열어 놓기도 한다.

그러나 레닌은 무슬림이 다수였던 러시아 소수민족들의 독립 운동을 지지했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나 마나’ 논쟁하는 것보다 그런 천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억압에 함께 맞서는 것을 더 중시했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성장이 중요하다

반자본주의신당(NPA)은 극좌파 중 입장이 비교적 괜찮고 그 덕분에 급진화하는 이주민 활동가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NPA도 뜨거운 쟁점에서는 회피하는 태도를 종종 보인다. 최근 ‘교사 참수’라는 끔찍한 비극이 터졌을 때 민감한 쟁점이 된 이슬람혐오적 교육 관행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원칙 있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인종차별 활동가들의 노력이 유의미한 변화를 낳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2018년 유색인 청년들이 경

찰에 혹독한 탄압을 받을 때, 주로 백인들로 이뤄진 노란조끼 운동 참가자들이 유색인 청년들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이주민 후손들과 백인들을 갈라놓았던 벽을 넘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다마 트라오레를 위한 정의’ 운동에 꾸준히 참여해 온 반인종차별 활동가들이 두 운동 사이에 다리를 놓았기 때문이었다.

12월 5일 보안법 반대 시위도 비슷한 잠재력을 엿보였다. 이날 여당의 일부 양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90개 지역에서 10만 명가량이 보안법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나섰다. 그 안에서는 노동자와 실업자의 권리,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 경찰 폭력으로 숨진 유색인 청년 문제 등 다양한 쟁점도 함께 제기됐다.

혁명적 좌파가 마크롱의 (서로 연결된) 권위주의적 조치 강화와 이슬람혐오 정책에 원칙 있게 반대하며 운동에 잘 개입한다면, 이런 운동 안에서 정부와 파시스트에 맞서는 운동도 성장시키고, 인간질에 의한 분열을 극복하면서 그들 자신도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유럽의 핵심 국가이고 프랑스 노동자 운동은 높은 전투성을 자랑해 왔다. 하지만 프랑스의 운동은 만만찮은 공격을 버리고 있는 마크롱 정부와 파시스트의 부상이라는 심각한 도전들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 정부와 파시스트들은 특히 이슬람 혐오를 무기 삼아 노동계급 대중을 얼어붙게 만들고 그들의 단결을 가로막으려 한다. 이를 물리칠 반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성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 전원 석방

“오히려 우리를 연행한 정부가 망신당했습니다”

12월 6일 그리스에서 경찰이 살해한 이를 추모하는 집회 개최를 이유로 체포됐던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활동가들이 10시간 만에 풀려났다. 다음은 연행됐던 페트로스 콘스탄티누가 전해 온 소식이다. 페트로스 콘스탄티누는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전국 소집자이기도 하다.

12월 6일 그리스 정부는 알렉산드로스 그리고로폴로스 추모 시위를 금지하려 했다. 알렉산드로스는 2008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15세 청소년이다. 당시 사건은 한 달 넘게 이어진 대규모 반란을 촉발해서 청년들이 학교를 점거하고 거리에서 경찰과 싸우고 경찰서 100여 곳이 공격당했다. [당시 한국에서도 연대 집회가 있었다.]

올해 집회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알렉산드로스가 살해당한 곳에 현화하는 제안으로 시작됐고 좌파와 노동조합이 호응하면서 계획됐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도 80명 규모의 작은 시위를 조직했는데 경찰은 이들을 연행한 것이었다.

나와 함께 시위에 참가하다 연행된 사람들 중에는 황금새벽당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2명이 포함됐는데, 특히 이 둘이 연행된 것은 엄청난 반향을 낳았다.

각종 정당과 노동조합에서 정부를 비난했고 즉각 석방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직면했다.

경찰서 안에서 우리 80명은 구호를 외치며 아주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순번을 돌아가며 시리자, 공산당, 여러 노조에서 보내 온 연대 메시지를 유치장 안에서 크게 낭독했다. 우리는 정부에 제대로 굴욕을 안겼다!

우리는 10시간 후에 석방됐다. 경찰은 공중보건법 위반으로 우리를 기소했고 이후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를 패배시켰다. 경찰 폭력은 우리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전선이다.

지금 정부는 방어적이고 고립돼 있다. 반면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저항을 조직하는 최전선에서 돋보이고 있다.

번역 김종환



운동가인 사회주의노동자당원

연행되면서도 투지 보이는 사회주의노동자당원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공산 큰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김영익

최근 중국과 호주 사이에 갈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호주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극 협력해 왔다. 올해 호주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지난 11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자 중국 시진핑 정부는 호주산 쇠고기 수입 제한, 보리·와인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호주에 무역 보복책을 잇달아 시행했다.

물론 바이든 측은 호주를 두둔하며 나섰다. 바이든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은 미국이 호주와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호주의 갈등은 대리전으로 여겨진다. 동맹 강화를 천명한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진핑과 바이든 양측의 신경전이 벌써 시작된 것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바이든과 그의 외교·안보 인사들은 대체로 오바마 정부에서 활동했고 월가와도 긴밀히 연결된 자들이다.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표방하며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데 미국의 역량을 집중하려 했다. 바이든이 내정한 내각 인사 중 국무장관 지명자 앤터니 블링컨,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에이브릴 헤인스 등은 '웨스트이그재 어드바이저스'라는 전략 컨설팅 기업 출신이다. 이 기업은 주로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구글 같은 대기업들에 자문을 해 주는 곳이다.

바이든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대외 정책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그래서 바이든 측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업무를 총괄하며 전권을 행사하는 직책(일명 '아시아 차르')을 신설하려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이 직책 아

래에 중국 담당, 인도 담당, 일본 등의 동맹국 담당을 맡을 선임 국장 3명을 둘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무역전쟁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빠르게 악화돼 왔는데,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아시아의 불안정은 계속 점증할 것이다.

물론 바이든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면에서 트럼프 정부와는 다소 다른 행보를 할 수 있다.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 다수는 경제 국수주의를 비롯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이 주도해 온 기존 국제 질서를 약화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며 미국의 전통적 위치를 다시 강화하려 한다. 바이든은 아시아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질서를 다지고 확대하려 할 것이다.

바이든은 임기 첫 해에 "국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적해 미국 주도 하에 전통적인 서방 동맹들과 인도 등 새로운 "민주주의" 파트너들의 결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은 부쩍 미국(서방)과 중국의 갈등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포장한다.

그러나 바이든 같은 자가 중국을 비

난하며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을까? 그는 경찰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벌여 논란이 되자 몸통 대신 '다리를 쏘라'고 했던 자다. 소위 '민주주의' 진영에 포함되는 각국 정상들 중에는 이스라엘의ネタ냐후, 무슬림 살해 방조자이자 농민 탄압자 인도의 모디, 브라질의 새로운 극우 대통령 보우소나루처럼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강성 우익 정부 수반들이 있다. 바이든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거대한 기만이자 위선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제국주의(적) 갈등이다. 양측 지도자들의 합리화와 궤변을 비판하며, 국제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외국기업책임법

바이든은 세계가 1930년대 대불황과 제2차세계대전기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적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너무 무분별하게 무역전쟁을 벌였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실제 바이든 측의 대선 공약에는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 위기가 워낙 심각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12월 2일 미국 하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외국기업책임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3년 연속 조사를 거부한 중국 기업은 미국 증시에서 퇴출될 것이다.

바이든 측도 이런 흐름에 호응할 것이다. 지난 2월 제이크 설리번은 한 기고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왜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의 중국 금융시스템 진출이 미국[정부]의 협상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느냐?" 미국 국내 산업에 투자돼야 할 자금이 중국으로 가는 걸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5G 통신,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산업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초당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바이든도 중국을 배제한 5G 네트워크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의회에 상정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서 미군과 전략 무기 배치에 위험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따라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한국의 LG 유플러스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 같다.)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은 트럼프와 공화당 못지않게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 문제에서 강경하다. 그들은 중국 군사력을 압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군사력 전진 배치와 군비 증강에 찬성해 왔다.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다자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강화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일 동맹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동맹일 것이고, 여기에 한국 등이 협력자로 합류하길 원할 것이다.

물론 바이든 정부가 아시아에서 원

하는 대로 중국을 제압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장기 불황 속에 미국의 동맹 진영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불거질 소지가 커진 데다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예전 같지 않다. 게다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중동 등 다른 지역에도 관여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 견제에 역량을 오롯이 집중하기는 여전히 힘들 것이다.

대만해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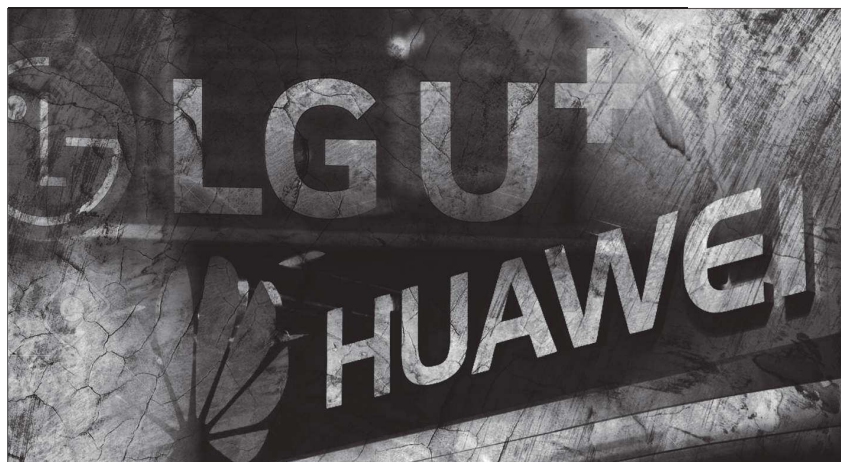
결국 바이든 정부가 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 질서를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 책략을 계속 동원하는 것은 물론, 때로 확실한 우위를 입증할 모험수를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중 갈등의 심화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 갈등들을 자극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아시아에서 돌발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미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기존의 갈등이 커졌고, 대만해협 같은 일부 지역은 꽤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됐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장관을 보내고 무기를 대거 수출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그리고 올해 미국 민주당도 정강(정책)의 대만 관련 진술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기존 표현을 뺐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공언해 왔을 만큼 예민한 문제인데, 미국 민주당의 입장도 중국에 대해 이전보다 강경하게 바뀐 것이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 대만해협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가장 큰 지역의 하나일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그러나 패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미국과 그 도전자들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심화되면 그만큼 세계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

▶ 9면으로 이어짐



바이든은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수단들을 이어가려 한다. 화웨이 장비를 쓰는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더 거세질 수 있다

▶ 8면에서 이어짐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으로 있던 2013년, 당시 한국 대통령 박근혜를 만나 “미국의 반대편에 베풀하는 것은 좋은 베품이 아니다” 하고 은근히 협박한 바 있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는 통상·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협력 증대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을 포위하는 다자 군사 협력에 대한 참여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악화 속에서 한국 지배자들의 딜레마는 더 깊어질 것이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후 논란이 일자, 청와대 대변인은 ‘RCEP은 중국이 주도한 협상이 아니고 협상 시작부터 이번 타결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한국이 처한 처지가 그리 녹록치 않음이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브레인인 입안자들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다 포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들도 한미동맹 일본도로 너무 치우치면 곤란하다고 보는 것일 뿐, 한미동맹이 외교·안보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 공유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등에서 일본과의 타협을 적극 모색하는 것도 바이든의 대외 정책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한국, 일본, 미국과의 삼각 전략동맹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이 있을 것”(민주당 의원 김진표)을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한편, 12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RCEP 등을 견제하기 위해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꺼낸 듯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타협할 가능성을 계속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

이란 모델

다른 한편,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가도 한반도의 불안정 문제는 여전할 것이다. 바이든도 북·미 관계를 제국주의(적) 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보기 때문이다.

앤터니 블링컨은 2020년 9월 미국 C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북한을 쥐어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대북] 경제 압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밀접하게 협업하고 중국을 밀어붙여야 한다.”

블링컨이 북핵 문제 해결의 모델로 이란 핵협정을 제시한 바 있어서, 소위 ‘이란 모델’이 언론에서 언급된다.

그러나 블링컨 등은 바로 그 모델을 따라 ‘국제사회’(즉, 서방 제국주의)가 북한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 위에 앉히는 것을 우선한다. 그러려면 “[북한이] 생존이 위협한 수준에 처했다고 믿는 수준까지 강화된, 포괄적이고 지속적이고 가차 없는 국제 압력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대북 압박 강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반발을 불러 한반도의 긴장 수준을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이란 핵협정이 끝내 휴지조각이 되는 과정이 보여 주듯이, 북핵 합의들은 결국 협상 테이블 바깥의 정세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즉,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잠정적 합의를 맺어도 제국주의(적) 갈등이 낳는 불안정 때문에 그 합의가 오래 유지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로서 바이든 정부를 잘 설득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문재인 정부가 보조를 맞추게 될 공산이 훨씬 크다.

대안

바이든 정부 하에서 북·미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듯하자,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 설블리 상

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에 일부 좌파 단체도 영향을 받은 듯, “쌍중단(북핵 동결과 한미연합군 사훈련 동시 중단)”이 내년 상반기에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쌍중단 요구는 한반도 평화 운동 안에서 미국과 북한 양측을 모두 공평하게 비판하는 내재적 논리와 연결되곤 했다. 즉, 자칫 미국의 대북 압박이 당면한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책임이라는 점을 흐릴 수 있다. 북한 핵무기가 아래로부터의 반제국주의 운동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북핵은 세계 최강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한 것이 낳은 효과일 따름이다.

쌍중단 같은 요구를 내놓아야 평화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모을 수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된 책임이 미국에게 있음을 회피하면서 대중 추수적으로 평화주의적 지지를 모으는 것은 원칙에 입각한 것이 못 된다. 무엇보다 막상 대중 행동이 필요할 때 적들의 이간질로 운동이 마비될 수 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정부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적이고 능동적인 지지다.

장기 불황과 점증하는 제국주의(적) 경쟁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곳곳에서 불안정을 키워 왔다. 그리고 이 불안정이 머지않은 미래에 특정 상황과 맞물려 한반도에서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

일관된 좌파라면 반제국주의적·반자본주의적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제국주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재인 정부와 전략적 제휴를 추구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지배계급의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맞서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이 대안은 반자본주의와 분리될 수 없다. 제국주의가 세계 자본주의의 최신 국면을 뜻하기 때문이다. 아무 열강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급진성과 철저한 좌파성을 지향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

영국과 유럽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서로 맺을 새로운 무역 관계를 합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친(親) 유럽연합 중도 좌파는 총리 보리스 존슨과 현 정부 뜻을 했지만, 이는 오해다. 비록 존슨과 현 정부가 우익적이고 무능하긴 하지만 이 갈등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다.

유럽연합과 존슨 정부는 협상에 걸린 판돈을 비교적 뚜렷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 주권을 일부 공유하는 프로젝트였다. 이것을 주도한 것은 유럽의 두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였다. 두 나라는 75년 간의 굉장히 파괴적인 충돌 끝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유럽연합이라는 틀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을 결집시켜 자신들의 목표를 따르게 했다. 비록 두 나라의 목표가 때때로 상충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존슨이 대변하는 영국 지배계급의 일부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영국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본다. 이들은 영국 자본가 세력들 중에서 소수임이 거의 분명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현재 주류이다.

“결정권을 되찾자”는 말은 단지 이데올로기적 몽상이 아니다. 존슨과 그 일당은 국가 주권을 되찾아서 규제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국 자본주의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존슨의 전 수석 보좌관 도미니크 커밍스는 유럽연합의 정부 보조금 규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하려 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인 무스타바 라만이 지적했듯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꿈꾸는 산업·혁신 강자 유럽이라는 비전은 … 규제에서 자유로운 미래의 영국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런 영국은 일종의 ‘격침 불가능한 항공모함’이 돼, 유럽연합 27개국에 대한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적 지배를 지속시키는 구실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프랑스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 영국을 무역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럽연합의 “규제권 위성국”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오직 이 조건을 받아들일 때만 영국 기업들이 유럽단일시장에 관세 없이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려 한다.(서비스 수출은 고려 대상도 아니다.)

둘째, 브렉시트를 이용해서 런던을 유럽의 금융 허브 지위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 측 협상 대표 미셸 바니아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부터 애써 왔던 바다.

바니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전(前) 독일 중앙은행 총재 악셀 베버가 지난주에 지적했듯이 말이다. “유럽의 분열은 런던 금융가에 막대한 득이 된다. 유럽이 단결했다더라면 브렉시트의 타격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이 … 훨씬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 내 금융 중심지들의 경쟁, 프랑크푸르트 대 파리의 경쟁이 특히 문제였다.”

그러나 유럽단일시장과 그 시장의 규칙에 영국을 매어 두려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자신의 우위를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있다.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는 애완동물 여권, 여행 건강 보험, 영국 은행들의 유럽 시장 접근 등 온갖 쟁점을 나열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세르비아나 스위스 같은 비회원국에도 인정해 준 권리를 영국에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본질적으로 무역 협상에서 득을 보려고 이런 쟁점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유럽연합 잔류를 확고하게 지지했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질타하며 “유럽연합이 협상에서 너무나 강경한 태도를 취한 나머지, 지난 10월에는 유럽연합 자동차 업계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할 정도였다”고 보도했다.

마크롱은 이제 막 합의되고 있는 협상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마크롱은 유럽연합의 영국 해역 조업권 문제를 부각했다. 경제적으로는 사소하지만 민족적으로는 영국 해협을 사이에 둔 두 나라(영국과 프랑스)에 상징성이 큰 문제다. 그러나 마크롱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다. 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으로 대표되는 독일이 영국에 너무 많이 양보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경쟁력이 훨씬 높은 독일 산업은 영국이 독자적인 자본주의로 부상해도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덜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조지 몽비오가 브렉시트를 두고 “자본주의에서 일어난 내전의 결과”라고 한 것은 옳다. 몽비오는 이것을 “자본주의 기업의 두 가지 주된 형태” 사이의 충돌로 설명한다. 하나는 유럽연합으로 대표되는 “길들여진 자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일체의 규제를 거부하는 “군벌 자본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은 두 자본주의 블록의 갈등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위기에 휩싸인 이 세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두 인류 제국주의 간의 아귀다툼이기도 하다.

이 다툼에서 누가 피해를 볼지는 불보듯 뻔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34호 / 번역 이원웅



미국에 타협해 온 문재인 정부 지난 11월 27일 문재인 정부는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방한한 외중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사드 배치를 위한 장비 반입을 강행했다

저임금, 노동통제 ...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양효영 비정규직 담당 기자

이케아는 현재 약 50개 나라에 400곳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만 20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 하청업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한국에서도 매장이 4곳으로 확대됐고, 평택에 대규모 물류창고도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의 이케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노동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한국만의 일도 아니다. 글로벌 기업 이케아는 전 세계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해 왔다.

이케아 생산 하청업체의 노동 환경을 조사한 ILO 보고서(2015년)는 등나무 가구를 만드는 제3세계 이케아 하청 노동자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조차 못 받으며, 특히 여성의 처우는 더 열악해 3분의 2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1990~2000년대에 이케아는 제3세계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해 큰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한편,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케아에 맞선 저항은 계속돼 왔다.

2011년 미국 버지니아주(州) 이케아 공장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이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비인간적인 노동 통제까지 겪어 왔다.

당시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 사망으로 출근을 못할 때 - 벌점 1점, 휴식 시간이 아닐 때 화장실 가기 - 벌점 1점. 벌점 5개면 문서 경고를 받고 9개면 해고 당합니다.”

어떤 노동자는 관리자가 화장실을 못 가게 해 결국 옷에 지렸는데, 옷을 갈아입으러 휴게실에 갔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국제운수노련이 유럽의 이케아 제품 운송 노동자들의 조건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운송 노동자들은 한 달에 200유로(약 300만 원)도 못 버는데, 몇 주 혹은 몇 달간 트럭에서 잠을 자며 일을 해야 했다.



글로벌 이케아에 맞서 조직과 투쟁을 확대해 온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지역 이케아 사측의 해고에 항의하는 연대 시위가 영국 전역에서 벌어졌다

한 루마니아 트럭 노동자는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계약서에는 우리가 시간당 8.50유로(약 1만 3000원)를 받는다고 써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그 정도를 벌지 못해요. 게다가 제가 어디서 먹고 잡니까? 제 트럭 운전실이에요. 이렇게 두세 달을 사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노조 탄압

이케아는 미국·아일랜드·포르투갈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기도 했다. 중간 관리자들이 위압과 협박을 가했다. 프랑스에서도 이케아 사측이 노동자들을 뒤통사하려고 경찰 문건에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는 혐의가 폭로됐다.

이에 대해 이케아 사측은 잡아땀지만, 우연히 노조 탄압과 관련한 내부 문건이 발견되면서 악랄한 실태가 드러났다.

미국에서 이케아 사측은 악명 높은 ‘잭슨 루이스’ 로펌을 고용해 노조 탄압 계획을 짜 왔다. 이 로펌은 노동조합을 “제

3자”, “외부인”으로 묘사해 비노조원과 이간질시키고, 업무 평가를 핑계로 노조 활동가를 해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조언했다.

그럼에도 미국 등지에서는 이런 방해 행위들을 뚫고 노조가 건설됐다.

최근 영국 글래스고의 이케아 사측은 코로나19 와중에 유급병가 수당을 후퇴시키려 했다. 그리고 이런 사측의 계획을 폭로한 노동조합 대표를 “기밀 유지” 위반이라며 해고했다. 영국 전역의 이케아 매장에서 이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비록 복직은 못 했지만, 이런 항의들에 밀려 이케아 사측은 노조 대표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양보를 내놔다.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이케아 노동자들은 파업과 저항을 벌여 왔다.

한국의 이케아 노동자들의 저항은 전 세계에서 횡포를 부리는 ‘가구 공룡’ 이케아에 맞선 글로벌 노동자 저항의 일부다.

비정규직 배송 노동자도 착취하는 이케아

박점환 울산 노동자

이케아 배송 노동자들은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들은 이케아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하청 물류회사를 통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는 지입제로 일을 한다. 필자는 주변 이케아 배송 노동자들로부터 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지입제란 개인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하는 제도인데 정말 문제가 많다. 이 과정에서 약덕 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을 구입하는 ‘사기’를 당해도 개인 책임이라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취입이 돼도 사측이 책임져야 할 차량 보험료, 수리비 등을 배송 노동자가 책임져야 한다. 고객과의 분쟁이 생기거나 운행을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모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열악한 근무 환경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주6일 근무에 대체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한다. 게다가 노동 시간이 매우 탄력적이기도 하다. 고객 사정에 따라 빨리 끝나면 오후 3시에 끝날 수도 있

고, 늦을 때는 오후 10시가 돼도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정해진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이 없고, 식사 비용조차 노동자가 해결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은 몸에 악영향을 줘서 과로사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게 한다.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월급제가 아닌 개인의 매출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 대체로 월 매출이 600만 원가량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돈을 노동자들이 온전히 임금으로 받진 못한다. 노동자들은 자기 임금을 다른 노동자와 나눠 가져야 한다. 배송하는 무거운 물건을 2인 1조로 나르는데, 추가 인력 비용을 이케아가 부담하지 않고 배송 노동자의 매출액에서 200만 원가량을 빼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러 비용을 제외한다.

이케아는 배송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비용과 근무 환경을 책임져야 한다. 지입제라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이케아 물품을 진열·판매하는 노동자들이나 물품을 실어 나르는 노동자들이나 모두 비정규직 일자리에 불과하다. 결국 사측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가구 왕국’ 이케아 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들춘다

스웨덴의 가구 제작 판매 다국적기업 이케아는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웹사이트의 기업 소개만 보더라도 이케아는 “사람과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친환경,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다양성과 포용 등 가치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케아의 실상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

나치 지지자였던 이케아 창업주

이케아 창업주 잉바르 캄프라드(2018년 사망)는 나치 지지자였다. 그의 가족은 독일계 이민자 출신으로 히틀러를 지지했다.

캄프라드는 17살 때 유대인 혐오와

인종차별로 악명 높은 스웨덴 파시스트 페르 엥달이 이끄는 나치 정당에 가입해 활동했다.

이케아는 성소수자와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광고로 상품을 팔아 왔는데, 그 창업주가 유대인과 성소수자를 가스실로 보낸 나치 지지자라는 건 엄청난 위선이다.

캄프라드는 1994년에서야 직원들에게 “[나치 지지]는 내 생애 가장 큰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2010년 한 인터뷰에서는 “[스웨덴 파시스트] 페르 엥달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생각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스웨덴 나치 운동을 연구해 온 저명한 작가 엘리사베트 오스브링크는 “캄

프라드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나치 신임 당원을 모집하고, 나치 지지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동독 비밀 경찰과 유착

1943년 설립된 이케아는 당시 스웨덴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주택 건축 계획에 힘입어 급속히 성장했다. 이후 이케아는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기지를 임금이 낮은 동유럽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패하고 억압적인 독재 정권들과 유착해 왔다.

이케아는 1960~1980년대 동독 비밀 경찰과 협력해서 정치범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이케아 가구를 만드는 데 동원하기도 했다.

환경 파괴

스스로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무를 소비하는 기업이 바로 이케아다. 2019년에는 2100만 세제곱미터의 나무가 이케아 제품을 만드는 데 소비됐는데, 한 줄로 뉘이면 지구를 7바퀴 휘감을 수 있는 양이다. 지금도 1초에 한 그루씩 이케아 제품을 위한 나무가 스러져 간다.

게다가 2020년 4월 영국 환경운동 단체는 이케아가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불법 채집된 나무를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단체는 부패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고 벌목권을 줬었는데, 이케아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혐의를 제기했다.

2017년에는 루마니아에서도 불법 벌목 혐의가 제기됐다.

탈세

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케아도 세금 회피로 악명이 높다. 이케아는 스웨덴 기업임을 강조하는데 정작 본사는 높은 세금을 피해 네덜란드로 옮겼다. 이케아는 기업 지배구조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대규모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다. 유럽 의회의 녹색당은 2009~2014년에만 이케아가 약 10억 유로(약 1조 3600억 원)를 탈루했다고 폭로했다.

양효영



탄력근로 확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12월 9일 새벽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레임덕이 시작되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정권 수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실은 청와대와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약화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개악안 처리도 문재인 정부의 계급적 본질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 준다. 정권에 대한 지지가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변함없이 기업주들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아 기업주들이 정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악안은 광범한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개악이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개악안이 통과됐다. 탄력근로제는 법에 정해진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만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그 내에서는 사용자들 마음대로 노동시간의 길이·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악으로 단위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면, 6개

월 이상 최대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과 달리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다.

게다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근로 산정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악에 추가됐다. 이는 사용자들과 야당이 탄력근로 확대만으로 부족하다며 추가로 요구해 온 개악의 일부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 내의 노동시간 평균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일 근로시간 상한이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반해 선택근로제는 일간, 주간 노동시간 상한 제한이 없어 일 24시간, 주 100시간도 가능하다.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면, 계산상으로는 3개월 중 1개월 동안 676시간(52시간×13주)을 몰아 일해도 제재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개악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완 입법이라며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들에게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줘 사실상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이 대폭 허용돼, 노동조건 악화, 임금 삭감, 압축된 장시간 노동과 생활



노동 존중은커녕 공격 일변도 '노동 존중'이 쓰여진 편을 들고 행진하는 노동자들

리들의 파괴 등 노동자들의 조건과 건강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957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길고, 과로사도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개악까지 추진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 개악은 2019년 경사노위 합의보다도 더 개악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인지를 보여 준다.

노조법도 개악

한편, 정부와 여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노조법도 일부 개정했다. 노동계가 크게 반발한 개악 중 일부를 제외했을 뿐, 여전히 개악이 포함된 안을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만, 기업 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한하고 있

고, 해고자나 산별노조 간부 등의 작업장 내 노조 활동도 제약하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경우에도 해고자·퇴직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됐지만, 여전히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점거파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은 외면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수당 지위를 이롭게 개악을 밀어붙이는 데 휘두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과 같은 개혁 입법들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번 노동개악에 양대노총은 모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단체들은 노동개악에 대한 실질적 항의의 행동을 확대해 가야 한다. 노조법 개악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개악과 같은 광범한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를 낳는 개악에 진지하게 항의를 조직해야 투쟁의 동력을 키울 수 있다.

지금은 정권 핵심부가 연루된 부패 의혹과 이를 무마하려는 정부의 무리수가 국가 기관 내 분열을 심화시키는 상황을 이용해 저항을 전진시킬 수 있는 기회다. 검경 개혁 같은 정부의 포퓰리즘 수사에 휘둘리지 말고 부패 문제와 같은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면서 대중의 불만을 대변하고 노동개악에 대한 항의를 키워 나가야 한다.

코레일네트웍스 한 달째 파업

이 최저임금 갖고 기재부 관료들이 살아 보라지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와 여객매표, 고객상담, KTX특송, 주차관리 등을 맡으며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광역 전철 회기역은 정규직이, 신이문역은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역무원이 담당하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3월 코레일네트웍스를 “바람직한 자회사 방안”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처우는 결코 ‘모범’적이지 않다.

2018년 철도공사는 공사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이 근속 수준이 같은 공사 노동자 임금의 80퍼센트 수준이 되게끔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철도공사 정규직 대비 44퍼센트 수준으로, 세후 임금이 월 160만 원에 불과하다.

각종 복지 수준도 열악하다. 정규직은 명절상여금을 약 209만 원, 연 2회 지급(공사대표 호봉인 4급 18호봉 기준)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100만 원이 전부다. 복지포인트도 절반만 받는다.

인력이 부족해 아파도 연차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규정상 2인이 근무해야 할 역에 여전히 1인이 근무해야만 한다.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의 약 93퍼센트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자회사 정규직’의 모습이다.

한편, 노동자들은 평생 일하고 퇴직해도 국민연금을 33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2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기로 한 지난해 합의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평생 저임금

철도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노동자 처우 개선에 아무 관심이 없다.

지난해까지 철도공사는 위탁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아 자회사 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부족분을 메꿔야 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사측도 위탁비가 부족해 처우 개선이 어렵다고 해 왔다. 그런데 사장이 법인카드로 가족 여행비와 생활비, 정치 활동비, 심지어 담배까지 구입하며 2년 동안 7400여만 원을 유용한 것이 밝혀져 8월에 해임됐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쓸 돈은 없다면서 자신의 담뱃값은 차고 넘치게 쓴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위탁비가 늘어 재원이 있음에도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또다시 정부 지침을 근거로 임금 대

폭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저임금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은 고작해야 최대 4.3퍼센트다. 이 인상률을 코레일네트웍스에 적용해 봐야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다.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이미 직무급제가 시행돼 왔는데, 근속 기간이 길어져도 임금이 제자리 수준이다.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이다.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가 임금 억제에 있음을 잘 보여 준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0.9퍼센트로 결정됐다.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올해 위탁비가 늘어나 지급 여력이 있는 만큼 올해는 반드시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파업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철도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파업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런 열악한 현실과 사측의 책임 회피는 단지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열악한 처우에 맞서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이 파업과 투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일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서울역 기차 플랫폼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라며 LED 촛불을 들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최저임금이 더 무섭다”는 게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만큼은 기필코 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더 확대돼야 한다.

이재환